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기본 과제	연구책임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공공건축사업 성과평가체계 구축 연구	염철호
어린이 보행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김승남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김영현
공공건축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	김은희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건축서비스 산업 해외 진출 지원 방안 연구	손동필
가로친화형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연구	임유경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범죄위험 평가 도입 방안 연구	조영진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Shrinking-smart) 도시재생 전략 연구	성은영
한국 현대 건축가 직능의 제도적 형성에 관한 연구	이강민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건축분야 기초연구	엄운진

①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공공건축사업
성과평가체계 구축 연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의무화되었다. 그간 부실했던 공공건축사업의 기획단계가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통해 어느 정도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획단계 이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초기 기획이 충실히 반영되고 준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 및 평가수단이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총사업비 관리, 사후평가 등 현행 공공건축사업 평가 및 관리제도는 주로 초기 단계에 치우쳐 있거나 단계별 사업비 관리 위주로 되어 있어, 공공건축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조성사업 전반에 걸친 성과관리나 성과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 공공건축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 공공건축사업의 추진과정이나 성과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그간의 공공건축사업과 관련한 정보구축 및 활용 체계가 미흡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순환구조의 실현을 위하여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에서 운영에 이르는 전 프로세스에 걸친 성과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의 기획단계에서 설정한 사업의 목표와 성과목표가 단계별로 확인·반영되고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타 사업의 추진 시 활용되는 공공건축사업 전 과정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으로 도입된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공유재산으로서 공공건축의 조성·운영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염철호

② 어린이 보행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생활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의 일환으로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개선 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 근린의 경우, 어린이의 보행과 자전거 이용권의 공간적 범위가 유사하다. 이러한 통학권 내의 물리적 환경은 어린이의 보행안전과 통행습관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학교 근린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공간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정책의 추진에 요구되는 기초 이론 연구와 방법론 정립이 미진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근린단위의 어린이 보행안전 개선 정책에 활용 가능한, '정책의사결정지원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학교 근린의 어린이 보행안전 성능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적용대상 학교를 선정한다. 다음으로 어린이의 보행통학권 분석을 통해, 사업대상학교 근린의 공간적 범위를 결정한다. 그 후 어린이 보행안전 진단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다음으로, 도시설계 팔레트와 디자인 샤레트(charrette: 집단 토론회)를 활용해, 주민참여형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행안전 개선사업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도출할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 안내서"는 향후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유도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

③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우리나라에서의 건축정책은 2007년 「건축기본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건축기본법」으로 국가와 광역시·도에서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2010.5.)되고,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 인천, 대전, 부산,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15개의 지자체가 이미 건축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거나 현재 수립 중에 있다.

그 동안 건축정책에 대해 목말라 온 현실에서 「건축기본법」과 건축기본계획이 지난 5년간 우리 건축계에 놀라운 영향을 주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다수의 건축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각종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전담지원기구 설립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건축계에서 할 수 있는 정책과 일들이 많아졌다. 특히 건축정책 지원기구로서 건축진흥원, 공공건축지원센터, 국가한옥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등 다양한 기구 설립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이들 기구가 향후 건축·도시환경을 비롯한 건축업계에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5년간 건축정책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건축기본법」 제정을 준비하던 당초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행정적·정책적 한계가 있으며, 새롭게 변화되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향후 건축계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다.

본 연구는 제1차 건축정책이 완료되는 현시점에서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부문별, 주제별, 성격별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실천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및 정책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는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축기본법」 개정방향, 중앙 및 지방정부 관련부서의 역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지역건축위원회 등 관련 기관별 역할, 건축정책 성과관리 체계 등 다양한 정책방안 제안할 계획이다.

김영현

4 공공건축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

2013년 기준으로 집계된 우리나라 공공건축물 수는 총 17만7천여 동으로, 건축물 신축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부분적인 개보수가 시작되는 15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 수도 전체의 약 74%에 이르는 등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 및 이용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인구 대비 공공건축물 비율이 커짐에 따라, 신축을 지양하고 기존 건축물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수가 약 670만 동에 이르는 통계치를 고려할 때, 향후 건축시장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증가 및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차원의 선도적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리모델링 관련 정부 정책은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이나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등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성능개선, 또는 공동주택 수직증축과 같은 주택사업의 하나로 지엽적으로 대응해 왔고, 이에 국한하여 법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건축물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시설의 노후화뿐 아니라 기후환경 및 건축물 사용자의 공간수용 방식의 변화 등 다양하다. 또한 신축과 달리 기존 건물의 물리적 현황 파악 및 안전성 진단 등 건축물 여건에 따라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범위의 편차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리모델링의 특성을 전제로, 사업 기획부터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발주기관 및 설계자 시공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지원 및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외 리모델링 관련 정책과 제도를 조사하고 현행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특성 분석, 사업 후 효과성 분석, 유관기관의 기능 및 역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으로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계획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자산으로서 공공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제도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김은희

5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건축서비스 산업 해외 진출 지원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해외진출 지원정책은 대부분 건설, 시공분야거나 도시 및 단지차원의 개발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대부분 도시개발과정에서 정보 및 금융에 대한 강조, 다양한 분야로의 사업 확장과 건설 프로세스의 종합적인 운영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그 예로 일본, 유럽, 미국 등의 사례를 들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패키지식 개발형태는 금융, 디벨로퍼, 정부부처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발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

건축서비스 산업분야로 한정해보면, 국내 건축서비스 산업은 갈수록 침체되어, 공공분야를 제외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건축서비스 산업 분야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은 정보 및 일부 자금 제공에 그치고 있어 미흡하며, 관련 국내 연구 또한 거의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정책 및 지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건축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타 분야(환경, 농업, 의료 등)의 ODA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여,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까지 국내·외 ODA를 통한 건축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사례를 검토하여 해외 진출을 위한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손동필

6 가로친화형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연구

20세기 초반 근대 도시계획에서는 도로를 자동차 이동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표준화된 설계 기준을 도입하였으며, 건축물은 가로로부터 독립적인 개체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도시개발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질 높은 보행환경, 다양한 이동수단의 공존 등 가치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도시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서 가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 도시에서는 사람을 위한 '장소로서의 가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공유가로(Shared Street)',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통합가로(Complete Street)'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부산 등 국내 도시들도 보행자우선도로 사업과 자동차 도로를 줄여 보도를 확장하는 도로다이어트 등 보행친화형 도시를 지향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이용을 위한 '도로(Road)'가 아닌 삶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가로(Street)'는 가로 주변의 건축물과 대지에서 사람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적공간에서의 행위가 공공공간으로 확대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공간이 된다. 따라서 가로 정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도시환경의 질을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인 가로 공간 자체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건축물과 주변의 토지이용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별 공간을 다루는 법령이 배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가로를 활성화하고, 가로와 건축물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데에 제약이 되는 요인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로 조성을 위한 지향점을 설정하고 국내 가로현황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의 복합적 고려, 건축물과 가로와의 관계 설정, 공간이용의 유연성 확보라는 제도 개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법령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임유경

7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범죄위험 평가 도입 방안 연구

국내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2012년 서울시 시범사업(마포구 염리동)이 성공적 평가를 받은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수의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 시행과 더불어 관계 법령에 대한 제·개정 등 제도정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범죄예방설계원리에 기초하여 대상지 내의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범죄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는 것으로, 범죄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평가를 범죄 위험평가 또는 범죄영향평가라고 하며, 올바른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범죄위험평가 과정이 필수적이며, 범죄위험평가 과정을 생략한 채 디자인 전략이나 기법만을 적용한다면 범죄를 저감하는 효과가 떨어진다.

최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발표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은 범죄위험평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모델의 제시가 없어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범죄위험평가 방법론은 전문적인 지식과 시간, 비용이 요구되어 사업추진주체가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수행하는 건축·도시 분야 실무자와 공무원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죄위험평가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유관 제도에서도 범죄위험평가 관련 내용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법령, 조례, 도입 사례 등의 관련 정책을 조사·분석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외 범죄위험평가 모형을 조사하고 평가모형에 이용된 관련 지표를 분석하여 건축도시 분야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범죄위험평가 모델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수립한 범죄위험평가 모델과 기존 범죄위험평가 모델을 종합하여, 범죄위험 환경설계 가이드라인과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범죄위험평가를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정비계획 등 각종 건축 및 도시 관련 계획 수립 시 범죄위험평가 모델을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활용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조영진

8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Shrinking-smart) 도시재생 전략 연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여건 변화로 도시공간의 노후와 쇠퇴는 지속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 저성장과 경기침체의 국면에서 대규모 개발에 의존한 경제논리만으로는 도시의 재생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일찍이 도시의 성쇠를 경험한 서구와,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는 과잉개발로 인한 도시재생 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적정규모의 도시재생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기존 도시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그 도시에 맞게 인구, 건물, 토지이용 등의 규모를 산정하고 덜 개발하는 ‘스마트 축소(Shrinking-smart)’를 통한 재생방식에 대한 논의와 그 적용 사례들이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은, 보장되지 않는 미래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무리한 개발과 투자를 하기 보다는, 기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간계획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한 사회 선순환 구조에 주목한다.

우리나라 역시 개발 위주의 도시 확장 및 도시 재생은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도시재생 정책도 점진적인 변화와 성장을 꾀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유럽이나 미국 등과 다른 쇠퇴 양상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도시들에 적합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전략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축소가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도시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의 질은 물론 공공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

해서는 수요와 맞지 않는 규모, 이용 빈도가 낮은 공간들에 대한 ‘축소를 수용하는’ 계획으로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시축소의 전반적인 양상 및 요인을 분석하고 유형을 구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스마트 축소 계획과 다양한 재생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지역의 유휴공간이나, 문화자산 등을 활용하여 점진적인 소규모 도시재생 방식에 이론적이고 계획방법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적정규모의 도시재생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은영

9 한국 현대 건축가 직능의 제도적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 현대 건축가 직능의 범위와 사회적 역할에 관한 논쟁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찍이 동아시아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아키텍처(Architecture)와 아키텍트(Architect)의 개념은 처음 번역될 때부터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식민지적 상황과 고도성장기의 혼란이 가중되어 현재까지도 건축가의 정체성은 암중모색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건축과 건축가의 발생 및 전개의 추이를 검토하되, 관제, 학제, 법제의 관계 속에서 한국 건축가가 제도화되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직원록, 졸업명부 등의 공문서와 회고록 및 선행연구를 취합하여 건축가들의 출신과 진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직능의 특징을 정리한다. 건축가의 제도화에는 1940년대 건축대사사 제도, 1960년대 건축사법이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용어들의 경쟁관계는 또 하나의 주요한 연구주제이다. 건축가, 설계자, 계획가, 컨설턴트, 디자이너 등의 단어가 각축을 벌이는 모습, 또 토목, 조경, 도시 등이 직능의 경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주로 법과 제도의 용어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요컨대 한국사회에서 제도적 직능으로서 건축가 정체성의 기원을 확인하고, 건축 관련 용어의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해석하는 본 연구는 건축정책의 대상을 선명하게 하고 관련 법제도에서 용어사용의 적정성을 참고할 수 있는 정책기초연구로서 기대효과를 지닌다.

이강민

10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건축분야 기초연구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기조로 평화통일기반의 구축을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여러 번 강조했다.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의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 준비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주요 업무 계획 중 미래준비 사업으로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핵심으로 제시하고, 구체적 과제로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 플랜 마련’, ‘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 기본계획안 마련’, ‘북한 국토실태 DB구축’, ‘북한 건축·주거현황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대비 건축분야의 준비를 진행해 왔으나, 이제 본격적인 시작단계이다. 통일대비 과제는 특성상 정책여건변화에 따른 북한 측의 호응에 따라 추진에 여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속적인 통일에 대한 준비는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통일관련 건축분야의 사업현황, 경험 등을 1차적으로 정리하고, 추후 여건변화 및 시나리오 등에 따라 통일시대를 대비한 건축분야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각 과제들의 추진여건 검토를 통해 시급성에 따라 장·단기 추진과제,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엄운진

2015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동 세미나 개최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1월 29일(목)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퍼시스 본사에서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와 공동주최로 “건강한 도시 만들기, 더불어 사는 도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의 방향을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도시만들기’로 설정하여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도시재생과 장소만들기’를 주제로, 황용득 (사)한국조경사회 회장이 ‘도시재생을 위한 푸른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서수정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정책의 전환과 특별법의 핵심전략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장소만들기’의 의미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거버넌스를 통한 사업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황용득 회장은 본인이 직접 참여한 ‘푸른마을 만들기’ 사업을 소개하였다. 주민참여 도시재생 사업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며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반영하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순천 한국여성건설인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발제자들과 이현희 한국여성건설인협회 부회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바람직한 도시재생의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50여 명의 건설 분야 여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도시재생을 통해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여성이 가진 특유의 섬세함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및 사전설명회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후원하는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 개최된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한옥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올해의 주제는 '상상 그 이상의 한옥 - 한옥은 (이)다'로 한옥준공, 한옥계획, 한옥사진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한옥준공부문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한옥이 대상이며, 한옥계획부문은 팀(4인 이내)이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가능하며, 용도에 제한은 없으나 제출자가 실제대지를 선정하여 계획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한옥사진부문은 일반인과 청소년(중·고등학생)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청소년 부문은 휴대용 촬영사진도 응모할 수 있다.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수여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과 총 4,30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전 작품접수는 7.27 - 7.31 까지이며, 1차 심사는 8월 초에, 2차 심사는 8월에 진행된다.

행사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8일 (토) 13:30 대전 무형문화재전수회관 및 동춘당 일대에서 계획 부문 사전설명회 및 답사가 진행되었다. 운영위원장인 김지민 목포대학교 교수가 올해 한옥공모전의 주제에 대한 해제를 한필원 한남대학교 교수가 '한옥을 읽다-동춘고택을 사례로'에 관한 한옥특강을 진행하였다. 또한 2014년 계획부문 대상 수상작인 '모두의 사랑채 국회의사당'을 강치호 한국전통문화대 학생이 발표하였다.

공모요강, 기존수상작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한옥센터 홈페이지(<http://competition.hanokdb.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주요일정

구분	작품접수	1차 심사	2차 심사
준공부문	7.27 - 7.31	8월 초	8월 중
계획부문	7.27 - 7.31	8월 초	8월 말
사진부문	7.27 - 7.31	8월 초	-



3월 28일(토) 개최된 '2015 대한민국 건축공모전' 계획 부문 사전설명회 및 답사



부산 건축문화자산 네이버 테마지도 서비스 개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부산지역의 영화 촬영지를 중심으로 근·현대 건축물과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건축문화 테마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는 국민들이 우수 건축문화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네이버 테마지도를 통해 다양한 주제의 건축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영화 속 부산, 건축문화 탐방』은 지난 서울편에 이은 두 번째 '대한민국 건축문화 탐방' 시리즈로, 부산지역의 주요 영화촬영지와 연계한 우수건축물을 소개(<http://me2.do/x0J2P127>)하고 있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광안리·해운대를 비롯하여 구도심지인 광복동·남포동, 역사문화 중심지인 동래 등 총 8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영화촬영지(62건)와 △자연경관(5건), △현대건축(63건), △근대건축(22건), △마을(7건), △산책길(8건), △재래시장(4건) 등 총 171건의 다양한 볼거리 정보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풍광과 화려한 야경, 첨단 마천루와 낡은 옛 골목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부산의 매력을 소개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은 "우수 건축물과 좋은 도시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문화자산 정보를 지역의 명소 및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촬영장과 근현대 건축물, 길, 마을, 자연경관 등 정보 제공